

社說

맥쿼리, 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이행하라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광주시 제2순환도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다. IMF 직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인프라를 조기에 건설한다는 취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3-1구간은 현재 유료도로로 후주계 다국적 펀드인 맥쿼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순환도로 시설에 대한 실제통행료 수입이 추정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비용보존방식에 따라 시 재정으로 미달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특별이익이 제기됐다. 시는 그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수입의 85%에 미달되면 재정보전금을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에 맞먹어 잡혀 매번 수백억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개통 이래 당초 예상통행량에 밀물면서 맥쿼리 등 민간사업자 측에 지원해준 금액은 2011년까지 1천190억원에 달했다. 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2012년부터 2015

년까지 4년간 지원금(851억원) 지급을 중단 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2016년 6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약 당시 광주시는 비용보존방식 대신 투자비보존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2천억 원을 절약한 대구 사례와 비교해 1천억 원 상당을 절약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도한 특별혜를 바로잡기 위해 맥쿼리에 사업재구조화를 재차 요청해놓고 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마지막 카드로 공익처분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통과 이후 지자체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 추정금액 1천86억원~1천644억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맥쿼리는 더 이상 지지하지 말고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즉각 응하는 게 도리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의 공익처분 결정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숨막히는 폭염' 피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광주·전남지역이 연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16-22일)도 광주·전남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한편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관측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특히 폭염일수 증가와 더불어 폭염 발생도 빨라지는 만큼 개개인의 건강관리와 함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폭염에 의한 피해예방이 절실하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나 수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낮 12시24분께 광주 남구 신장동의 한 논에서는 이모(65) 씨가 농약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탈진해 쓰러져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오후 2시51분께 전남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 계곡에서는 가족들끼리 물놀이를 하다가 김모(67) 씨가 물에 빠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폭염은 농작물이나 축산 피해는 물론이고 환경과 경제 등 우리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농촌마을과 재해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더운 시간대 시설하우스 및 농사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가두방수와 현장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등 폭염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는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냉방기가 구비된 경로당 및 금융기관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냉방기 정상 가동여부 확인 등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예외적으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강타한 살인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해 최소 65명이 숨졌다. 터키와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는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됐다. 이제 7-8월은 폭염 대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편집국에서



김재성 정치부장

민주당 광주시의원님들! 뭐하십니까?

원과 동시에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원 첫날 오전 '개회 후 정회', 둘째 날도 '개회 후 정회', 셋째 날도 '개회 후 정회', 넷째 날 역시 '개회 후 정회'다. 시의회 본회의 생중계 화면에 가장 오랜 시간 잡힌 것은 의원들의 모습이 아닌 '정회중'이라는 단어다. 그리고선 4일간 휴회. 현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거나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은 언급생심. 본회의장에선 6·13 선거 기간동안 유권자들을 향해 '한 표'를 애타게 호소하던, 민생의 대변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부끄러움 모르는 그들의 오만함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 시의원들의 이전투구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기도 전부터 일부 시의원 후보들이 '물밑'에서 의장 선거운동을 하던 게 포착됐기 때문이다. 시의원에 당선도 되기 전에 의장 선거운동이라니... 그들의 오만함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선거가 끝나고 시의회는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졌다. 23명의 시의원 중 정의당 비례 대표인 장영주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일당 독점의 장점(?)일까. 개원 전 민주당 의원들끼

리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나름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마저도 분란의 단초가 됐다. 지역내 유력 정치인들의 개입설이 불거진 것도 이 시점이다. 며칠 사이 상임위원장 후보가 들락날락 계속된다. 8대 시의회 개원 날인 지난 9일 오전, 의장 후보 3명(김동찬·김용집·반재신) 중 반재신·김용집 의원이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당초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쳤지만 막판 김동찬 의원 쪽으로 표가 쏠리게 배경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반 의원은 김동찬 의원 측에 자신들의 몫으로 일부 부의장·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한다. 후보를 사퇴했으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이다. 이렇게 촉발된 시의회 파행은 12일까지 4일간 매일 반복됐다. 양당 구도라도 이런 모습은 아닐 터. 의회는 없고 민주당만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유권자는 당선들이 부끄럽다

8대 시의회에 입성한 민주당 시의원 중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당선된 인물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유권자 중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 등 면면을 제대로 알고

선택한 경우는 얼마나 될까. 단언키 힘들지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정치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6·13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으로 끝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였기 때문이다. 단체장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시의원 선거는 더 더욱 그렇다.

물론 지방자치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방의회는 없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그 어떤 의회보다 막중하다. 산적인 현안에, 의정활동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시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노력, 정확한 판단, 도덕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治'와 '恥' 사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정치인의 정치는 기대할 게 없다. 안타깝게도 개원 첫 주, 민주당 시의원들이 보여준 '난장판'의 모습이 광주시의회에 현주소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중요한 건 이 같은 시의원들의 모습이 언론보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점이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묵묵히 당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평가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것이다. 지금 유권자들은 당선들이 부끄럽다.

자치칼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경제 발전·청렴한 사회 만들어 달라

훈련을 강화해달라는 요구와 전라남도 발전 프로젝트에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달라고 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 대책과 함께 가공 및 유통, 판매 활성화에 대한 건의도 줄을 이었고 농업을 생명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단순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애김없는 지원을 펼쳐주길 바랐다. 선진국의 농업을 많이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며, 국내 농업에 집중하고 나름의 발전상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줄 것도 요구했다.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관광지를 대표적인 국민 관광지로 만들어 줄 것과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서남권 관광 지구와 전남의 대표적인 관광단지 개발을 하루속히 활성화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그동안의 차별과 홀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SOC 확충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안전성에 도 문제가 되는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도 주요한 민원대상이었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이들이 함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지원을 해달라는 것과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월호 참사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과 정책을 수립하도록 바꿨다.

문화 예술인들은 문화 분권과 기초 예술지원 강화 등으로 문화가 전라남도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길 희망했다.

체육인들은 도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공경함을 배우고 통합할 수 있도록 선진 스포츠 전라남도 계획을 다시 일고며 세우줄 것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길 주문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 강화에 힘써 달라고 했다.

눈치 안 보고 출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워킹 맘들은 일차 사회가 안고 가야 할 문제인 인식했고 어르신들은 불안한 노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문도 많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요구는 청렴도 향상이었다.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으

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공직사회가 한층 더 맑아지기를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다.

지역 어르신들도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많았다.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7기 시대가 개막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10일 개원식을 하고 제11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춧북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고 불변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선택은 제대로 전남을 발전시키라는 명령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인구 190만이 붕괴해 갈수록 침체해 가고 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좋은 일차 찾아가는 청년들은 아직도 줄을 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도민들과 함께할 때이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들었던 소중함 도민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운동화 끈을 단단히 다시 매어 민생현장으로 달려나가겠다.

독자투고

몰카 범죄, 예방할 수 있다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분노케 하는 이가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몰카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발생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6-8월 여름에 집중되고 있다. 몰카 피해자 중 98%는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카는 탈의실, 공공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볼품없다.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법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

지 않다. 그럼 몰카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피해자 측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공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을 있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사람 등을 조심해야 한다. 만일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 시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일반 몰카-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1천만원 이하, 위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천만원 이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범죄자 측면에서 단순 호기심이 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엄청난 성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작년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공공화장실 몰카를 찍은 남성에게 '성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더해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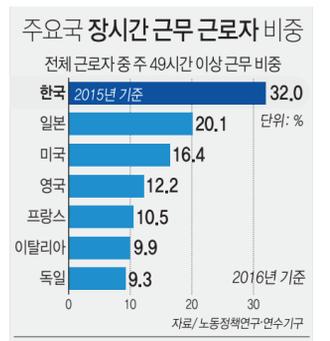
선진국들의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국민들의 입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범죄 처벌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시의 경우 군청과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을 편성, 예방과 단속을 통해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몰카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 휴가지에 여름경찰서(화성시는 제부도, 국화도)를 운영하고, 성범죄 전담 팀과 양행단속반을 꾸려 위터파크, 해수욕장 등 성범죄 우려 지역을 단속하고 있다. 몰카 범죄의 수단과 방법은 진화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도 변하고 있고 국민들의 조금만 관심이 가지면 몰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즐거움 여름 휴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흥·국성경찰서 읍내파출소

그래픽 뉴스

'과로 사회' 韓 근로자 32% 주49시간 넘게 일해...일의 1.6배

한국이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에서 주요국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보다 장시간 근로 비중이 훨씬 적지만 '과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한 경우가 한국은 32.0%로 독보적으로 많다. 3명 중 1명 가까이가 과로다. 일본은 이 비중이 20.1%로 한국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독일(9.3%), 이탈리아(9.9%), 미국(16.4%) 등에 비해서는 크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에서도 한국은 2천24시간으로 독보적이다. 일본은 1천71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59시간) 수준이지만 정규직만 보면 2천42시간으로 늘어난다. 정규직 중심으로 장시간 근무 관행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OECD 평균(88.3%)에 불과한 배경에 이런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가 일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일하는 방식 개혁에 나섰다. 주 40시간인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무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종전에 법적 구속력 없이 기준만 고시했던 것을 법으로 만들고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연방뉴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국국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시설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인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